

(사)한국미술사학회 연구윤리규정

- 2008년 4월 1일 제정
- 2014년 7월 16일 1차 개정
- 2018년 4월 15일 2차 개정
- 2024년 4월 13일 3차 개정

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 규정은 (사)한국미술사학회(이하 ‘본회’라 칭함)의 학술발표 및 「미술사학연구」(이하 ‘학술지’라 칭함)와 관련된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게 진실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 윤리)

- 가. 본회의 학술행사에서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본 규정을 주지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 성과물만을 발표하거나 투고해야 한다.
- 나. 연구자는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 다.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의 경우 정보 제공자로부터 확실한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라. 연구자는 자신이 공표한 연구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마. 연구자는 본 학회에 투고한 연구 논문을 동일 시기 다른 기관에 중복 투고하지 않는다.

제3조 (편집위원 윤리)

- 가. 학술지 편집위원은 모든 투고 논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취급하여 투고자, 심사자, 본회의 회원 사이에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나. 편집위원은 전 심사과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다. 편집위원은 부여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연구윤리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연구윤리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 윤리)

- 가. 학술지 심사위원은 위촉된 논문에 대해 학자적인 양심과 학문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
- 나.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견해에 따라 논문 투고자와 의견이 서로 상충된다는 이유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투고 논문에 대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없다.
- 다.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내용이 학술지에 게재될 때까지 공개해서는 안 되며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라. 심사서 작성의 표현에 있어서도 투고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제5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의거하여 정한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나. "변조"는 연구 내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다.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분석된 데이터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도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이미 출판된 본인의 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자신의 다른 논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행위
- 라. "부당한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마.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
- 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사.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으로 정한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본회의 학술발표나 학술지 게재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그 대상과 이유를 들어 본회에 서면으로 제보하고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가. 제6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제보가 접수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즉시 구성한다.
- 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다.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 정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단, 운영상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의 전문가도 윤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심의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는 윤리위원 위촉에서 제외한다.
- 라.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 가.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접수에 대해 충분한 증거자료 확보와 함께 조사에 착수한다.
- 나. 조사결과에 대해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판정하며 피조사자에 대한 제재 조치의 범위를 결정한다.

제9조 (심의기간)

- 가. 심의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 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써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초 제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한다.

제10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 가. 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본인의 동의를 거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하지 않는다.
- 나. 위원회는 부정행위의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제보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다.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변론의 권리 및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라. 피조사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소명기회)

- 피조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하며 소명 방식에 있어서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 (판정 및 제재조치)

- 가. 위원장은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 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논문 투고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① 학술지 게재취소,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 ② 학술지에 판정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고 금지.
 - ③ 본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해당 사실과 조치를 게시.
 - ④ 판정된 논문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일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 다. 연구논문의 중복투고가 밝혀질 경우 향후 5년간 투고금지

제13조 (이의신청 및 재심의)

- 가.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나.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 다. 재심의가 결정되면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제 14조 (세칙)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를 준용하며, 본 규정에 적시되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에 제정되었다.
2.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한다.
3. 본 규정은 2014년 7월 17일부터 발효한다.
4. 본 규정은 2018년 4월 15일부터 발효한다.
5. 본 규정은 2024년 4월 13일부터 발효한다.